

미래형 개인비행체 시장 개척

전주시,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위한 개발 포럼 개최 탄소섬유기술 활용 부분 특화기술 접근 등 제시돼

첨단항공소재스프레이드 드론추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전주시가 드론택시와 드론택배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형 개인비행체 시장도 개척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미래 떠오르는 시장이자 세계 신산업 분야의 핵심인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혼잡한 도심 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PAV는 지상교통망이 포화되고 드론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수직이착륙기능과 자율주행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이다.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시장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황창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단장의 '미래형 개인비행체 전망과 산업육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이재우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설계인증연구소장이 '미래형 개인비행체 핵심기술 및 추진동력 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병희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덕진 군산대학교 교수와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노상흠 캠퍼스융합기술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개발

과 전주시의 기존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PAV 핵심기술로 동체분야의 탄소소재 기술, 비행제어분야의 자율비행, 수직이착륙, 분산추진기술, 동력분야의 수소연료전지기술을 손꼽았으며, 현재 세계 최고기술 수준 대비 10~40% 수준의 국내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주시의 PAV시장 공략 전략으로는 주력산업인 탄소섬유기술을 활용해 부분 특화기술로 접근하고, 드론추구 등 드론 비행기술의 강점을 토대로 개인비행체(PAV)로 접근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동력 분야의 경우에도 향후 전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게 될 수소산업의 접근 방법으로 수소연료전지의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시는 미래형 개인비행체 개발과 전주시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항공 관련 전문가들을 방문하는 등 전주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왔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택된 전주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힘쓰고, 신산업 분야에서 전주시 특화산업과 기술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형 개인비행체는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국제 표준이나 교통 통제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토지보상 절차와 일정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보상 설명회를 가졌다.

탄소국가산단 토지보상 절차 안내

전주시·LH, 설명회 개최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룰 전진지가 될 전주 탄소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물건 조사에 앞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절차와 일정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보상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여 억원을 투입해 동산동과 고량동, 팔복동 일원 66만㎡(약 20만평)에 탄소소재, 최첨단 항공부품, 신성장 분야 등 70여개의 기업과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 20여개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가산단단지

사업의 개요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일정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기타 영입 및 영농 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토지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및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시와 LH는 다음달까지 토지보상 관련 지장물(수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열람을 실시한 뒤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쯤 보상금액을 확정해 개발통지하고,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날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내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해 산업단지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은 15일 효자도서관 2층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 갓 에브리씽)'의 개소식을 가졌다.

장애인 바리스타의 꿈 답아

카페 'I got everything' 효자도서관점 개소

전주시립 효자도서관에 전북지역 도서관 중 최초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가 들어섰다.

전주시립도서관은 15일 효자도서관 2층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남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본부장, 김미아 (사)다온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 갓 에브리씽)'의 개소식을 가졌다.

'I got everything' 카페는 공공기관 일조를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과 민간기관이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효자도서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곳 카페에는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3명과 비장애인 매니저 1명이 채용돼 근무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카페 운영은 위탁운영 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다온복지센터(센터장 김미아)가 맡게 되며,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전주시립도서관은 효자도서관에 이어 오는 12월 개관예정인 전주시립꽃심도서관(중화산동)과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책 놀이터로 탈바꿈 중인 평화도서관에도 'I got everything'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이번 카페 설치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도서관 내에 생긴 카페가 효자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전북대병원 '영양의 날' 행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환자와 내원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양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영양팀 주관으로 본관 1층과 호흡기센터 복도와 원내 카페 전문매장 앞 복도에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도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 치료식 식단 △ 저염과 저당 홍보물 △ 치료식 리플렛 △ 장관영양액과 디바이스 등을 전시하여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사전' 이벤트 참여를 통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입맛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한 영양상담으로 비만도, 영양상태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필수사항이다"면서 "앞으로 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병원으로서 도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전주푸드 김장문화축제, 11월 16일 개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번거롭고 힘든 숙제로만 느껴졌던 김장을 온가족이 함께 건강한 전주푸드 김장문화축제에 참가할 300가정을 선착순 사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장문화축제에는 온가족이 참가비 4만5000원만 내면 전주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식재료와 전라도 고유의 김장법으로 담긴 김장김치 10kg을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또 가족들이 함께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주김치의 명품 레시피로 우리 집 김치를 담가서 가져가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주시 농가들이 준비한 농촌체험 활동도 준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떡메치기와 버락골, 지푸라기공예, 향암배추로 김장담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김장문화축제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김장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직접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김장 나눔' 참가자는 전주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참여도 가능하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김장문화제를 위해 전주지역의 김장재소 생산농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우수 농산물을 선정했으며, 다양한 레시피를 테스트한 후 전라도 김치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축제용 레시피를 최종 선정했다.

2019 전주푸드 김장문화축제의 접수 마감은 오는 11월 3일까지이며, 선착순 300가족을 모두 채울 경우 조기 마감되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서둘러야 한다.

강성욱 제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2019 전주푸드김장문화축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고유의 김장문화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따뜻한 나눔으로 계승하고 세계로 확산시키는 특별한 축제"라며 "전주시의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김장문화를 즐기고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내용 및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njufood.org)를 통해 확인하거나 센터 사무국(063-211-2151)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2012년부터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적 의도 의심”

민주 이철희 의원, 법무부 국정감사서

“업무수행 불성실 검사 등 집중관리... 인사에도 반영돼 진상조사 실시하고 명단 공개해야... 윤석열 포함됐을 것”
김오수 차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공개는 검토”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

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취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며 "인사 결정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에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한다.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

전북경찰청, 결혼 이주여성 피해 사건 직접 수사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성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 수사를 직접 처리한다.

전북경찰청은 기존 관할경찰서에서 맡던 결혼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 수사를 지방청이 전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내 결혼 이주여성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및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을 보호할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관할 경찰서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 수사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보호 대책에 일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한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을 구성하고 폭행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경우 임시숙소를 비롯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재봉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결혼 이주여성의 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세심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언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통역과 함께 법률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